



보도자료

2009.10.4(일)

국회의원 김영우

(포천시·연천군)

(우) 487-800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8-8호 3층 Tel:031-533-0700 / Fax:031-533-0791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06호 Tel:02-784-1521 / Fax:02-788-3206

국정감사를 위한 현장조사로 생생한 인터뷰와 사진을 활용한 국감질의

- 개인사유지 軍 무단점용 서둘러 해결해야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방치된 군사시설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 호트러진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 자녀보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군인을 위해 군인밀집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 개인사유지 軍 무단점용 서둘러 해결해야

□ 강제수용위협하여 지상권설정을 통한 무상사용 즉각 시정해야

- 군은 법적근거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조기에 정리하여 군용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국방부가 현재 민간사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697만평으로 국방부가 관리하는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도 2,01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유지 무상사용 현황> 2009년 1월 1일 현재

구분	무상 사용			
	계	무단점용	지상권설정	무상동의
건수(필지)	3,916	2,441	1,096	379
면적(만㎡)	2,300 (697만평)	617 (187만평)	1,383 (419만평)	300 (91만평)
금액(억원)	2,019	756	861	402

특히 우리 군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187만평으로 국방부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도 최소한 756억에 달하고 있다.

군에 의해 무단 점유된 이들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그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영우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용당한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에 대해 군은 강제수용하겠다고 위협하여,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무상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김영우의원은 “군이 법적근거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조기에 정리하여 군용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강제수용 위협으로 민간사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치된 군사시설과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 군사작전 기능을 상실한 군사시설(용치, 방호벽)은 제거해야
- 방치된 군 유휴지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서둘러 설립해야

< 전국 군 유휴지 현황 > 2009년 1월 1일 현재

	총 필지	총 면적(만㎡)	총 토지가격(억원)
전국 군 유휴지	7,479	1,702(515만평)	6,520

< 전국 군 유휴지 광역시도별 현황 >

구 분		총 필지	총 면적(만㎡)	총 토지가격(억원)
수도권	서울	456	32	2,174
	인천	340	35	372
	경기도	2,373	677	1,256
광역시	부산	408	41	1,557
	대구	106	9	69
	대전	66	42	40
	광주	574	355	331
	울산	63	7	14
도·경기·외	강원도	1,725	237	375
	경북	481	59	129
	경남	285	31	55
	충북	80	7	45
	충남	95	5	11
	전북	222	87	32
	전남	204	78	60
	제주도	1	0	0
합 계		7,479	1,702	6,520

1. 군사작전 수행목적 기능이 상실된 군사시설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전시에 적군의 전차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된 대전차장애물 용치와 방호벽을 예로 들면,

< 방치된 용치 사진 >



이러한 용치들은 주위에 큰 도로가 생겨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돼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장마시 하천의 유속흐름을 방해해 범람과 역류현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 방치된 방호벽 사진 >



이러한 방호벽들은 주위에 큰 도로가 생겨 현재 대전차장애물 기능을 상실했으며, 이들 때문에 도로에 항상 그늘이 저 겨울철내내 빙판길이 되는데다 길도 좁아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김영우의원 “이러한 용치와 방호벽들은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 중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모두 합한 자산 보유 1위는 국방부로 45조 4,89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교육과학기술부로 17조 861억원, 3위는 산림청 7조 6,660억원, 4위는 국토해양부 6조 3,170억원, 5위는 경찰청 5조 6,724억원)

그런데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지는 전국에 최소 515만평이며, 미군이 소유한 군 유휴지는 350만평이다.

어떠한 활용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군 유휴지인 군부대 폐관사를 예로 들면,



이 사진은 28,524㎡(약 8천6백평) 규모로 기존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그대로 방치돼 있는 폐관사임.



이 사진은 8,272㎡(약 2천5백평) 규모의 군부대 관사터로, 이 역시 그대로 방치돼 있음.

이러한 군 유휴지의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시설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혐오시설로 전락하여 우범지역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국토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군 유휴지들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매각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현재 전국적으로 군 유휴지는 1,702만㎡(515만평)으로 전체 군용지의 약 1.7%에 불과하나, 올해 6월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하면 2020년에는 전체 군용지의 약 11.6%인 1억 1,890만㎡(3,600만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군 유휴지의 효

율적 관리와 처분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흐트러진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받은 인원 최근 4년간 33% 증가
- 군기강의 기본인 ‘복종의무위반’ 사병 최근 4년간 41% 증가
- 공금횡령 등 ‘청렴의무위반’ 인원 최근 4년간 133% 증가

1.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처벌 받은 징계현황

연도별	신분별	총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장군	영관	위관				
2005년		24,700	7	255	832	82	1,739	21,600	185
2006년		27,839	3	229	831	61	1,875	24,569	271
2007년		28,382	5	299	770	73	1,844	25,205	186
2008년		32,837	2	279	822	80	1,970	29,413	271

2. 군인복무규율 위반 중 “복종의무위반” 현황

연도별	신분별	총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장성	영관	위관				
2005년		12,803	1	27	179	25	552	11,994	25
2006년		14,219		12	142	14	569	13,464	18
2007년		14,616		29	107	11	556	13,890	23
2008년		17,768		36	164	15	618	16,914	21

3. 군인복무규율 위반 중 “청렴의무위반” 현황

연도별	신분별	총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장성	영관	위관				
2005년		366	1	10	15	4	66	254	16
2006년		550		14	10	2	82	432	10
2007년		633		30	13	10	85	490	5
2008년		856		13	13	4	87	726	13

지난 9월 17일 이명박대통령은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진급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10여년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군 기강도 다소 흐트러진 측면이 있다”며 대장 진급자들에게 “장병의 정신교육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군의 기강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은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먼저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의 수가 2005년 24,700명이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32,837명으로 4년만에 약 33% 증가하였다.

특히 군인복무규율 중에서 항명·상관모욕·상관폭행 등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일반 사병의 수가 2005년 11,99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16,914명으로 4년만에 41%나 증가했다.

또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수가 2005년 36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856명으로 4년만에 133%나 증가했다.

이에 김영우의원은 “군 기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병들의 복종의무위반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청렴해야 할 군인들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며 “국방부는 군 기강은 군 전력의 핵심인 것을 명심해야 하며, 장병들의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인자녀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군자녀용 기숙형학교’를 건립해야
- 군인밀집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 직업군인의 복무여건과 자녀의 보육/교육의 어려움 >

- 이사회수: 중령 평균 17.6회, 대령 평균 21.4회
- 읍·면이하 지역근무 비율: 군 간부 49.9%
- 군인자녀의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범위는 2-5%에 불과
- 군인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총 9개에 불과

1) 군인자녀의 교육문제

200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위에서 중령까지 평균 17.6회, 대령까지는 평균 21.4회 이사를 하고 있으며, 약 50%의 군 간부가 읍·면단위 이하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군인자녀의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범위가 2-5%에 불과하여 군인자녀들이 적기에 전학이나 편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군자녀용 기숙형학교를 건립한다면, 군인자녀의 교육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으며, 직업군인들 또한 군자녀용 기숙형학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7일에서 19일까지 계룡대지역에 근무하는 군 간부 1,0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3%가 군자녀용 기숙형학교 건립에 찬성하고 학교건립시 89.7%가 자녀를 입학시키겠다고 답변했다.(건립선호지역은 수도권, 경기, 강원 순)

이에 김영우의원은 “찾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로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군인을 위해 대다수의 군인들이 원하고 있는 군자녀용 기숙형학교를 건립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 군인자녀의 보육문제

군내 여군인력과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군 보유 보육시설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보육시설은 단 9개에 불과)

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군인밀집지역은 격오지가 많아 취약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보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영우의원은 “군인자녀의 열악한 보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역에 군인밀집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